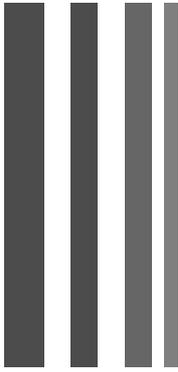




코로나19 시대 불평등 이야기

- ② “부” 를 독점한 사람들 -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3층)



순서

○ 프로그램

사회

한성규 부위원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 **코로나 예산, 증대 규모와 의의 - 코로나 예산 어디로 귀속되었을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3
-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코로나 시기 최대 실적**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
- **쿠팡 플랫폼의 등장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 의한 유통산업의 변화**
이성원 사무총장 | 한국중소상인지영업자총연합회 31
-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된 재벌총수들**
김주호 팀장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9

종합토론

I 발제 1.

코로나 예산, 증대 규모와 의의
코로나 예산 어디로 귀속되었을까?

II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 예산, 증대 규모와 의의

코로나 예산 어디로 귀속되었을까?

2021.10.1.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민주노총 연구원 자문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1. 코로나 이후 재정문제 어떻게 볼까

1991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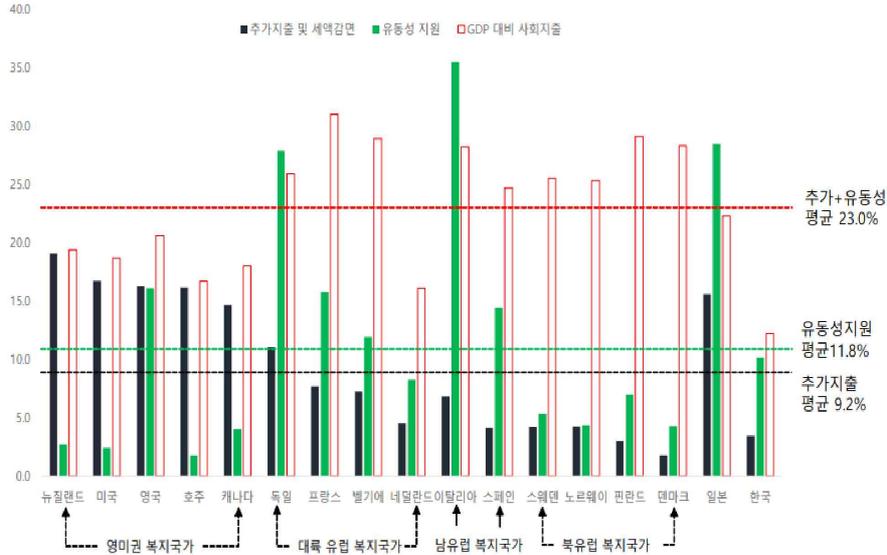
전대 미문 코로나 경제 위기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태

2차대전 폭탄이 누구 머리에 떨어질까?

케네스 로고프 교수(하버드 경제학)
“외계인이 지구 침공한 꼴”

OECD 국가 코로나 관련 지출 비교



IMF. 2021.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3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2019	2020	2021
Norway	6.61	Denmark -1.15	Norway -1.12
Denmark	3.78	Switzerland -2.59	Denmark -2.83
Netherlands	1.78	Sweden -3.07	Sweden -3.27
Germany	1.52	Norway -3.36	Switzerland -3.47
Switzerland	1.42	Korea -3.7	Finland -4.17
Greece	1.14	Germany -4.19	New Zealand -4.2
Austria	0.61	Netherlands -4.25	Korea -4.4
Sweden	0.59	Latvia -4.52	Germany -4.51
Canada	0.54	Estonia -4.9	Ireland -4.82
Ireland	0.49	Ireland -5.02	Portugal -4.84
Lithuania	0.46	New Zealand -5.26	Canada -5.97
Slovenia	0.43	Finland -5.44	Netherlands -6.06
Czech Republic	0.31	Portugal -5.68	Australia -6.65
Estonia	0.08	Slovak Republic -6.13	Estonia -6.67
Portugal	0.08	Czech Republic -6.15	Poland -6.69
New Zealand	-0.32	Poland -6.95	Japan -6.69
Australia	-0.53	Iceland -7.31	Slovak Republic -6.84
Latvia	-0.56	Lithuania -7.35	Latvia -6.98
Korea	-0.6	Hungary -8.11	Belgium -7.23
Poland	-0.69	Slovenia -8.35	Austria -7.26
Finland	-0.95	Austria -8.87	Hungary -7.5
Slovak Republic	-1.33	France -9.28	Lithuania -7.76
Iceland	-1.52	Belgium -9.38	France -8.4
Italy	-1.56	Italy -9.51	Slovenia -8.47
Belgium	-1.91	Greece -9.73	Spain -8.55
Hungary	-2.08	Japan -10.06	Czech Republic -8.67
United Kingdom	-2.35	Canada -10.66	United Kingdom -9.14
Spain	-2.86	OECD - Total -10.78	OECD - Total -10.12
Japan	-2.9	Spain -10.97	Greece -10.15
France	-3.08	Australia -12.27	Iceland -10.29
OECD - Total	-3.12	United Kingdom -12.39	Italy -11.39
United States	-6.69	United States -15.79	United States -15.92

OECD outlook No109 May. 2021

한국은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4

2020년 총지출 결산

구분	2019		2020				전년대비 (C-A)
	결산 (A)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 (B)	결산 (C)	추경대비 (C-B)	
총지출	485.1	9.7	512.3	554.7	549.9	△4.8	64.9
일반회계	277.7	△3.2	296.0	323.5	320.8	△2.7	43.1
특별회계	51.3	△0.3	55.1	54.0	53.6	△0.3	2.3
기금	144.9	2.1	161.1	177.3	175.2	△2.1	30.2

자료: 예산정책처 2020결산종합분석

5

2020년 재정수지 결산

구분	2019		2020				전년대비 (C-A)
	결산 (A)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 (B)	결산 (C)	추경대비 (C-B)	
통합재정수지(A)	△12.0	△13.0	△30.5	△84.0	△71.2	12.8	△59.2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42.4	△0.9	41.5	34.6	40.8	6.2	△1.6
관리재정수지(A-B)	△54.4	△12.1	△71.5	△118.6	△112.0	6.6	△5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결산 종합분석

6

2020년 국가부채 결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B-A	2020 실질 성장률	
캐나다	113.2	112.8	108.9	108.4	106.3	138.2	31.9	△5.4	
프랑스	106.4	109.3	110.6	109.7	109.7	129.1	19.4	△8.2	
독일	72.3	69.3	65.1	61.8	59.7	69.8	10.1	△5.1	
이탈리아	135.3	134.8	134.1	134.4	134.6	155.8	21.2	△8.9	
일본	230.5	235.7	233.5	235.9	237.6	257.9	20.3	△4.7	
한국	D1	35.7	36.0	36.0	35.9	37.6	43.8	6.2	△0.9
	D2	40.8	41.2	40.1	40.1	42.2	-	-	
영국	92.5	88.7	88.1	87.4	88.3	107.6	19.3	△9.9	
미국	136.5	138.1	134.7	136.2	135.0	160.3	25.3	△3.5	

OECD outlook No109 May. 2021

2020년 확진자 대비 재정지출



1~4차 추경 규모합은 67조원이 아니라 43조원!

뉴스 관련도순 최신순

67조원 추경 집행' 기강해이까지... 휴직전 둘러대준다
 대니투데이 | 2020.09.11. | 네이버뉴스 | [📄](#)
 집행을 앞둔 4차(7조8000억원)까지 올해 총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소극적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위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0.7%에...

4차 추경 7.8조, 올해 총 67조원 추경 투입... 본예산 13% 불구 '일베진 독'...
 헤럴드경제 | 2020.09.10. | 네이버뉴스 | [📄](#)
 미에 따라 올해 편성한 추경액은 총 67조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3월 1차 추경 11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4월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 6월에 경기보강 등을 위한...
 * 4차 추경 7조8000억... 총 67조 '일베'... 헤럴드경제 | 2020.09.10. | 네이버뉴스

[단독] 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 집행 0% 사업 무더기
 서울경제 PICK | 2020.09.08. | 네이버뉴스 | [📄](#)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67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추진한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의 돈이 채 풀리기도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거론되고, 2차 추경 발표와 동시에 3차 추경이...

올해 추경에만 67조 쏟아부었지만... 마이너스 성장 못 피한다
 이데일리 PICK | 10시10분 | 2020.09.13. | 네이버뉴스 | [📄](#)
 뉴스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출몰여 코로나19 대응에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쏟아부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부는...

	'19년 본예산	'20년					3회 대비 (B-A)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A)	4회 추경안(B)	
◇ 총 수입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 총 지출	469.6	512.3	523.1	531.1	546.9	554.7	+7.8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8.1)	
▪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84.0	△7.8
(GDP대비,%)	(0.3)	(△1.5)	(△2.1)	(△2.5)	(△3.9)	(△4.4)	(△0.5%p)
▪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118.6	△7.1
(GDP대비,%)	(△1.9)	(△3.5)	(△4.1)	(△4.5)	(△5.8)	(△6.1)	(△0.3%p)
▪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39.4	846.9	+7.5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9)	(+0.4%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8.6	106.1	

2020년 1차 추경 정부 설명

구분	주요내용	정부안	국회확정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0.1	0.25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2.2	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용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1.7	3.1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0.6	0.5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0.1	0.1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	2.4	2.4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0.6	0.7
	긴급복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0.4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0.1	0.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0.2	0.2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0.5	0.5
	재난대책비	-	0.4

추경안을 보자 (단위 십억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형태	20년본예산	추경안	증감액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3,400	4,750	1,35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신규)		0	1,054	1,05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기금)	용자	2,780	3,700	92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신규)		0	851	851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일자리아안정자금지원		2,165	2,761	59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		1,143	1,631	48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의료기관용자(신규)	용자	0	400	4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용자	2,030	2,430	4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신규)		0	380	38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44	344	300
교육부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법적교부금	53,811	54,064	252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가지출	72	312	240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기술보증기금출연	출연	360	525	165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소기업은행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지원)	출자	264	422	158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상환		18,436	18,570	13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2	1,330	12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	115	1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주차장혁신지원		470	573	10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0	100	100

11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12.2조원

① (지원대상 및 단계) 전 국민 지급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단계)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② (재원소요)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총 계원) 총 14.3조원 = 국비 12.2조원 + 지방 2.1조원
* (정부안) 총 9.7조원 (국비 7.6, 지방 2.1)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12

3차 추경 정부 설명

구분	주요내용	정부안	국회확정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	11.4
위aggi업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9	1.9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1	3.1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9.1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경기보강 패키지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0.9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3.2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5.1	4.8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2.4
총규모		35.3	35.1

13

3차 추경 집행액

분야	제3회 추경증액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금융 지원	5,029,065	5,029,065	100.0	5,029,065	100.0	
고용·사회 안전망	9,340,564	8,257,218	88.4	7,158,851	76.6	
경기보강	내수·수출·지역경제	3,106,284	2,876,784	92.6	2,715,900	87.4
	K-방역	1,267,436	1,175,565	92.8	1,118,058	88.2
	한국판 뉴딜	3,625,257	3,553,666	98.0	3,199,000	88.2
합계	22,368,606	20,892,298	93.4	19,220,874	85.9	

14

3차 추경 금융지원 집행액

분야	사업명	본예산 목표(A)	추경 목표(B)	집행 성과(C)	달성률 (C/A+B)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	+31.4조원	16.5조원	52.6
	기술보증기금 출연	-	+4.3조원	4.3조원	100.0
	산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	+16.9조원	7.76조원	45.9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	+11.7조원	15.6조원	133.7

15

3차 추경 금융지원 집행액

구분	산업은행 운용목표(A)	집행실적 (B)	집행률 (B/A)
금융시장 안정화	169,000	77,577	45.9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3,000	3,215	107.2
중소·중견기업 대출	50,000	35,696	71.4
비우량 회사채·CP매입기구(SPV)	20,000	12,200	61.0
증권시장안정펀드	10,000	200	2.0
채권시장안정펀드	20,000	6,000	30.0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22,000	1,845	8.4
회사채 차환 지원	19,000	4,240	22.3
CP 등 차환 지원	15,000	11,181	74.5
신보 신용보강 CP	10,000	3,000	30.0

16

3차 추경 회사채 지원

구분	채안펀드 (2020. 4.~)	회사채 차환 (2020. 3.~)	회사채 신속인수 (2020. 4.~)	SPV (2020. 7.~)
참여 주체	은행·생보·손보·증권 업계 등 84개 금융기관	산업은행	산업은행 등 18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증권업계 등	산업은행, 한국은행
재원 구성 및 규모	총 20조원 지원규모(산업은행 총 4조원, 기업은행 총 1.2조원)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 모집	산업은행 1.9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조성재원 10조원 ①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SPV 출자(1조원), ② 산업은행의 후순위 대출(1조원), ③ 한국은행의 선순위 대출(8조원)
신용 등급별	우량 AA	○	○	○
	비우량 A	△ ¹⁾	○	○
	BBB	-	⊙	○
	투기 BB	-	-	△ ²⁾
발행 목적별	차환	○	○	○
	신규	-	⊙	○
참여 방식별	수요예측	○	-	○
	인수단	-	○	○

4차 추경 내역

구분	주요내용	정부안	국회확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3.3	3.4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	0.5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	1.1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0.1
	실직자 지원(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0.3	0.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0.4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3	0.02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1.3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0.1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0.4
	아동학대 예방·보호	-	0.01
	목적예비비	0.1	0.0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코로나·독감 등 백신지원	-	0.2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	-	0.02
	총 규모	7.8	7.8

디지털 뉴딜 상위 사업 내역

부처	사업	20본예산	21경부안
금융위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0	600,000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제조현장스마트화)	500,000	600,000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211,154	578,510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46,764	453,590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0	400,000
과기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39,000	292,500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0	288,000
국토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일반철도 스마트 SOC)	44,101	189,000
국토부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	20,000	180,000
과기부	차세대인더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데이터바우처지원)	106,379	122,970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	26,900	103,400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국가시범도시 구축지원사업)	71,215	102,200
국토부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고속철도 스마트 SOC)	73,333	79,200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8,906	79,000
	2021년 세부사업 기준 상위13개 소계	1,657,752	4,068,370
	2021년 세부사업 기준 383개 총계	-	7,900,600

19

2021년 본예산 전년대지 증가액 상위사업(법적의무지출 제외)

소관명	회계명	분야명	세부사업명	20년본예산	21년국회확정	전년대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710,300	3,127,900	1,417,600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지방행정	지방채 인수(융자)	700,000	2,100,000	1,400,0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소상공인지원(융자)	2,300,000	3,700,000	1,40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사회복지	고용유지지원금	35,089	1,372,832	1,337,743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087,000	3,281,000	1,194,000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2,149	1,052,244	980,095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대책비(보조)	36,000	820,000	784,0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277,128	828,647	551,519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0	510,000	510,00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399,200	9,900,000	500,80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전세임대(융자)	3,873,250	4,366,250	493,0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0	467,600	467,60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행복주택(융자)	1,671,273	2,113,083	441,8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330,000	1,770,000	440,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00	500,000	400,000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일반·지방행정	복권사업비	2,856,347	3,228,804	372,45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회복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0	364,535	364,53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192	427,292	327,100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00,180	1,122,584	322,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통신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76,165	389,905	313,74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0	311,078	311,07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및물류	첨단도로교통체계	211,154	517,910	306,756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국방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85,028	586,106	301,078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0	300,000	300,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00,000	500,000	3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418,462	1,710,700	292,23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소재부품기술개발(R&D)	602,746	886,632	283,886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국방	전투예비탄약	551,951	814,737	262,78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82,040	534,000	251,960
국방부	일반회계	국방	항공장비(유지)	1,410,641	1,651,970	241,329

20

2021년 1차 추경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단위:조원)
		규모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의료기관 손실 보상	0.7
총 규모		15.0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기획재정부

21

2021년 2차 추경

[2021년 제2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단위:조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3.4)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8.1)	8.4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쉬백)	1.1
백신·방역 보강 (4.4)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4.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
지역경제 활성화 (12.6)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지방재정 보강(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12.2
총 규모		33.0

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 7., 기획재정부

22

2020년 본예산 부터 2021년 2차 추경까지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2021		증감 (B-A)	증감 (B-A)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제4회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총수입 (증가율) ¹⁾	481.8	481.6	482.2	470.7	470.7	482.6	483.4	0.8	514.6 (9.3)	+31.6
총지출 (증가율) ¹⁾	512.3	523.1	531.1	546.9	554.7	558.0	573.0	15.0	314.3 (12.4)	+31.5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0.5 (△1.5)	△41.5 (△2.1)	△48.9 (△2.5)	△76.2 (△3.9)	△84.0 (△4.4)	△75.4 (△3.7)	△89.6 (△4.5)	△14.2 (△0.8)	604.7 (9.0)	+31.8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71.5 (△3.5)	△82.0 (△4.1)	△89.4 (△4.5)	△111.5 (△5.8)	△118.6 (△6.1)	△112.5 (△5.6)	△126.0 (△6.3)	△13.5 (△0.7)	△90.1 (△4.4)	△0.2 (+0.1%p)
국가채무 (GDP대비)	805.2 (39.8)	815.5 (41.2)	819.0 (41.4)	839.4 (43.5)	846.9 (43.9)	956.0 (47.3)	965.9 (48.2)	9.9 (0.9)	△126.2 (△6.2)	+0.2 (+0.1%p)
									963.9 (47.2)	△2.0 (△10%p) ²⁾

23

2021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야별

단위: 억원

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26,066	5.26	27,974	5.19	28,049	4.93
2 연구개발	26,370	5.32	30,334	5.63	31,248	5.50
3 국제자본거래	21	0.00	1	0.00	1	0.00
4 투자촉진	10,742	2.17	6,287	1.17	21,610	3.80
5 고용지원	16,185	3.27	24,383	4.53	24,920	4.38
6 기업구조조정	1,351	0.27	1,575	0.29	1,624	0.29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8 지역균형발전	23,249	4.69	25,360	4.71	25,594	4.50
9 공익사업지원	6,565	1.32	7,168	1.33	7,261	1.28
10 저축지원	16,289	3.29	17,886	3.32	18,934	3.33
11 국민생활안정	158,674	32.01	169,608	31.47	176,102	30.99
12 근로·자녀장려	56,799	11.46	52,175	9.68	51,904	9.13
13 기타직접국세	17,391	3.51	19,793	3.67	20,152	3.55
14 간접국세	106,118	21.41	125,023	23.20	120,963	21.29
15 외국인투자	1,455	0.29	1,415	0.26	1,455	0.26
16 제주국제도시육성	1,188	0.24	877	0.16	889	0.16
17 기업도시	26	0.01	59	0.01	61	0.01
18 지역발전	1	0.00	10	0.00	11	-
19 농협구조개편	525	0.11	566	0.11	573	0.10
20 공적자금 회수	-	-	-	-	-	-
21 수협구조개편	47	0.00	50	0.01	50	0.01
23 기타	26,638	5.37	28,361	5.26	36,876	6.49
합계	495,700	100.00	538,905	100.00	568,277	100.00

24

2021년 조세지출 예산서 수혜자별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219,984	69.71	229,640	68.82	231,692	68.19
② 고소득자	95,605	30.29	104,042	31.18	108,086	31.81
계	315,589	100.00	333,682	100.00	339,778	100.00
(총계 대비)		(66.7)		(69.9)		(69.7)
(2) 기업						
① 중소기업	125,260	70.55	148,108	73.82	156,758	70.00
② 중견기업	5,676	3.20	6,266	3.12	7,324	3.27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20,875	11.76	20,158	10.05	32,733	14.62
④ 기타기업	25,722	14.49	26,097	13.01	27,102	12.11
계	177,533	100.00	200,629	100.00	223,917	100.00
(총계 대비)		(35.81)		(37.23)		(39.40)
(3) 구분곤란	2,578		4,594		4,582	
총 계	495,700		538,905		568,277	

25

2022년 조세지출 예산서 수혜자별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239,097	69.7	241,756	68.8	255,191	68.0
② 고소득자	103,959	30.3	109,453	31.2	120,262	32.0
계	343,056	100.0	351,209	100.0	375,453	100.0
(총계 대비)		(64.8)		(62.8)		(63.1)
(2) 기업						
① 중소기업	129,239	70.9	146,251	71.9	148,838	69.3
② 중견기업	6,803	3.7	7,062	3.5	8,270	3.9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19,662	10.8	24,935	12.3	29,255	13.6
④ 기타기업	26,559	14.6	25,104	12.3	28,340	13.2
계	182,263	100.0	203,352	100.0	214,703	100.0
(총계 대비)		(34.4)		(36.4)		(36.1)
(3) 구분곤란	4,038		4,805		5,052	
총 계	529,357		559,366		595,208	

26

2021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효과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고소득자	대기업	기타	합 계
전 체	△15,856	△14,099	△1,432	△39,090	△1,185	△71,662
국가전략기술	-	△12,465	-	△39,735	-	△52,200
국가전략기술 외	△16,978	△1,634	△1,432	645	△63	△19,462

27

기능별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단위: 백만원)

역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증감액	문재인 4년 증감액
공공질서및안전	15,025	15,787	16,943	17,497	18,140	19,075	20,132	20,837	22,305	3,115	4,165
과학기술	5,908	6,060	6,566	6,768	7,018	7,007	7,303	8,241	8,980	1,110	1,962
교육	49,770	50,700	52,919	53,186	57,412	64,190	70,649	72,634	71,208	7,642	13,795
교통및물류	19,012	18,894	20,294	19,819	18,624	15,326	15,655	19,182	21,424	-388	2,800
국방	33,317	34,739	36,747	37,847	39,023	41,827	45,344	48,693	51,418	5,706	12,394
국토및지역개발	5,290	4,796	4,512	3,875	3,511	3,666	4,098	4,049	5,085	-1,779	1,573
농림수산	18,386	18,733	19,306	19,395	19,622	19,726	20,030	21,515	22,656	1,236	3,034
문화및관광	5,028	5,413	6,120	6,630	6,893	6,461	7,250	8,018	8,482	1,866	1,588
보건	8,732	9,234	10,401	10,534	10,356	11,101	12,120	13,522	14,697	1,624	4,341
사회복지	88,671	97,205	105,281	112,866	119,127	133,515	148,877	167,021	185,046	30,456	65,919
산업,중기업에너지	15,520	15,378	16,422	16,264	16,024	16,309	18,764	23,715	28,649	504	12,625
예비비	3,900	3,535	3,006	3,150	3,000	3,000	3,400	8,600	-900	5,600	
일반·지방행정	55,805	57,248	58,026	59,517	63,338	69,021	76,560	79,013	84,677	7,533	21,339
통신	7,186	7,413	7,552	7,511	6,976	6,989	7,332	7,886	8,443	-211	1,468
통일·외교	4,121	4,214	4,496	4,679	4,566	4,724	5,065	5,509	5,704	445	1,138
환경	6,296	6,456	6,812	6,863	6,916	6,898	7,397	9,013	10,616	620	3,700
총지출(예산)	341,968	355,805	375,403	386,400	400,546	428,834	469,575	512,250	557,987	58,578	157,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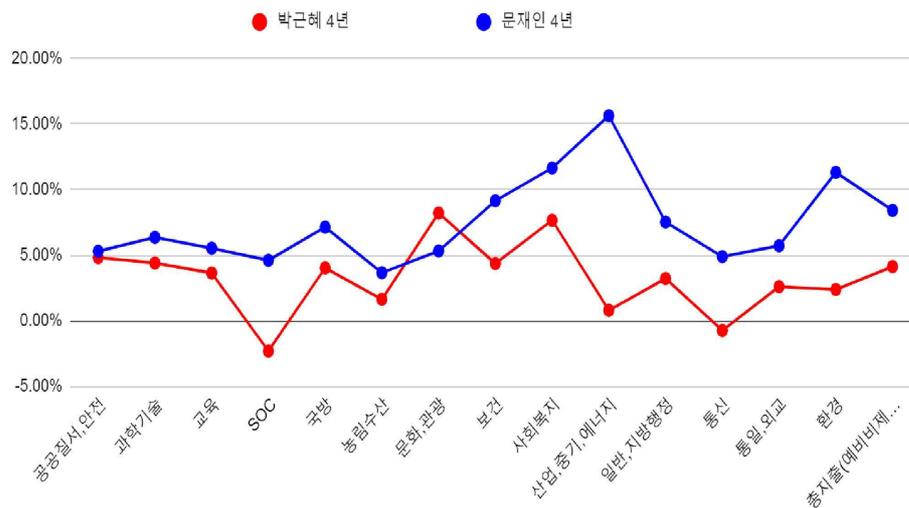
28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율 (단위: %)

증감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연평균 증감률	문재인 4년 연평균 증감률
공공질서및안전	5.1%	7.3%	3.3%	3.7%	5.2%	5.5%	3.5%	7.0%	4.8%	5.3%
과학기술	2.6%	8.3%	3.1%	3.7%	-0.2%	4.2%	12.8%	9.0%	4.4%	6.4%
교육	1.9%	4.4%	0.5%	7.9%	11.8%	10.1%	2.8%	-2.0%	3.6%	5.5%
교통및물류	-0.6%	7.4%	-2.3%	-6.0%	-17.7%	2.1%	22.5%	11.7%	-0.5%	3.6%
국방	4.3%	5.8%	3.0%	3.1%	7.2%	8.4%	7.4%	5.6%	4.0%	7.1%
국토및지역개발	-9.3%	-5.9%	-14.1%	-9.4%	4.4%	11.8%	-1.2%	25.6%	-9.7%	9.7%
농림수산	1.9%	3.1%	0.5%	1.2%	0.5%	1.5%	7.4%	5.3%	1.6%	3.7%
문화및관광	7.7%	13.1%	8.3%	4.0%	-6.3%	12.2%	10.6%	5.8%	8.2%	5.3%
보건	5.8%	12.6%	1.3%	-1.7%	7.2%	9.2%	11.6%	8.7%	4.4%	9.1%
사회복지	9.6%	8.3%	7.2%	5.5%	12.1%	11.5%	12.2%	10.8%	7.7%	11.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9%	6.8%	-1.0%	-1.5%	1.8%	15.1%	26.4%	20.8%	0.8%	15.6%
예비비	-9.3%	-15.0%	4.8%	-4.8%	0.0%	0.0%	13.3%	152.9%	-6.3%	30.1%
일반·지방행정	2.6%	1.4%	2.6%	6.4%	9.0%	10.9%	3.2%	7.2%	3.2%	7.5%
통신	3.2%	1.9%	-0.5%	-7.1%	0.2%	4.9%	7.6%	7.1%	-0.7%	4.9%
통일·외교	2.3%	6.7%	4.1%	-2.4%	3.5%	7.2%	8.8%	3.5%	2.6%	5.7%
환경	2.5%	5.5%	0.7%	0.8%	-0.3%	7.2%	21.8%	17.8%	2.4%	11.3%
총지출	4.0%	5.5%	2.9%	3.7%	7.1%	9.5%	9.1%	8.9%	4.0%	8.6%
총지출(예비비제외)	4.2%	5.7%	2.9%	3.7%	7.1%	9.5%	9.0%	7.9%	4.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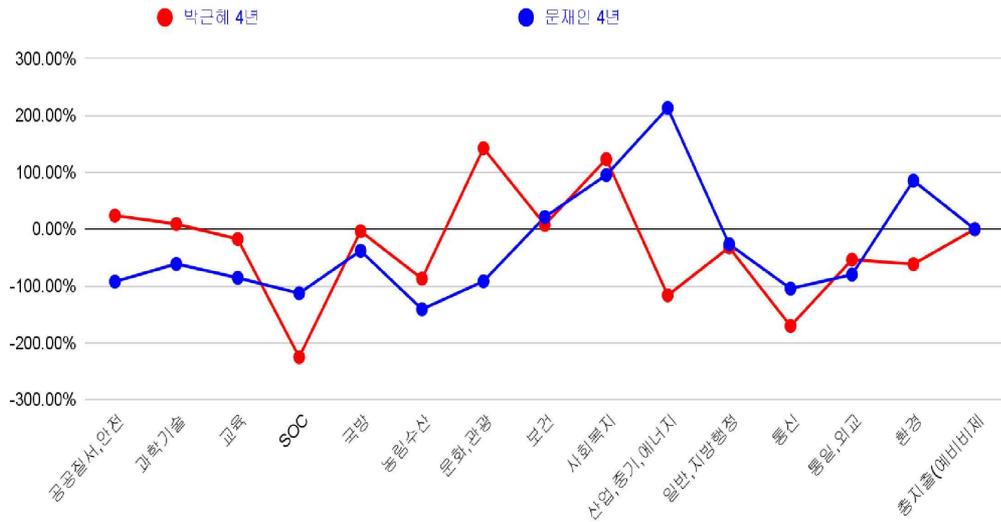
29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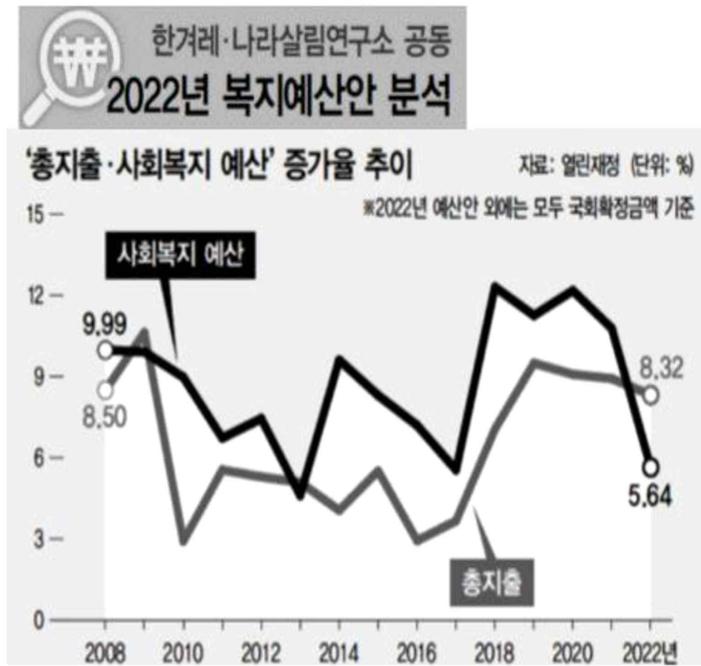
30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표준화 비교



31

2008년 이후
사회복지 예산
/총지출



32

I 발제 2.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코로나 시기 최대 실적**

II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기업과 플랫폼기업 코로나 시기 최대 실적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1. 코로나 시기 상장사 고배당
2. 코로나 시기 물류기업 최대 매출
3. 코로나 시기 플랫폼 기업 최대 실적
4. 2021년 상반기 대기업 최대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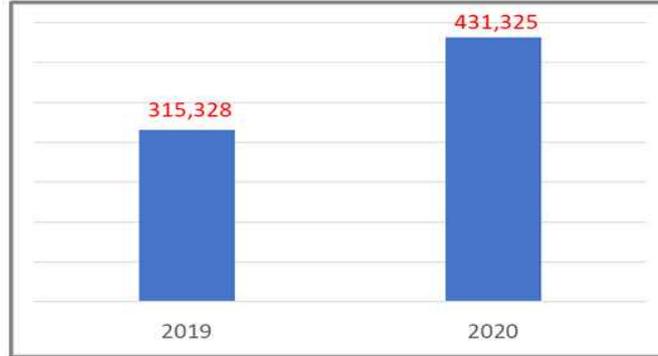
2020년 코스피 매출액 감소 순이익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연결기준		
	2019년	2020년	증감률
매출액	20,365,178	19,610,763	△3.70
영업이익	1,040,750	1,074,072	3.2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04,776	880,096	9.36
순이익	537,039	634,533	18.15

출처 :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20년 결산실적

2020년 상장기업 배당금 증가



자료 :
애프안가이드

- 2020년 상장사 1,083곳, 배당금 총액은 43조1,325억원.
- 2019년 상장사 1,103곳, 배당금 총액은 31조 5,328억원
- 코로나 와중에도 11조5,997억원(36.7%) 배당 증가

연 배당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

기업명	2019	2020	기업명	2019	2020
삼성전자	9조6192억	20조3381억	우리금융지주	5056억	2600억
신한지주	8839억	8038억	메리츠증권	1357억	2227억
SK하이닉스	6840억	8003억	쌍용양회	2123억	2217억
현대차	1조535억	7855억	LG전자	1359억	2169억
한국전력	0	7806억	NH투자증권	1507억	2107억
LG화학	1536억	7784억	LG유플러스	1746억	1965억
SK텔레콤	7301억	7151억	삼성증권	1518억	1965억
KB금융	8611억	6897억	삼성카드	1707억	1921억
POSCO	8012억	6203억	삼성에스디에스	1856억	1856억
KT&G	5570억	5956억	LG생활건강	1844억	1844억
하나금융지주	6165억	5394억	GS	1800억	1800억
삼성생명	4759억	4489억	엔씨소프트	1076억	1762억
LG	3869억	4396억	한국금융지주	1697억	1755억
기아	4611억	4009억	한온시스템	1708억	1708억
삼성물산	3299억	3794억	메리츠화재	948억	1511억
삼성화재	3613억	3741억	DB손해보험	949억	1321억
기업은행	3826억	3729억	현대글로벌비스	1313억	1313억
SK	2679억	3701억	미래에셋증권	1821억	1301억
현대모비스	3750억	3701억	롯데케미칼	2296억	1234억
KT	2698억	3265억	메리츠금융지주	742억	1185억
고려아연	2474억	2651억	금호석유	409억	1158억
현대중공업지주	2705억	2615억	삼성전기	832억	1059억
			BNK금융지주	1173억	1038억

자료 :
애프안가이드

물류기업 급성장

<130개 상장사 평균>

구분	2019	2020
매출액	3,795억	3,990억
영업이익	157억	160억
순이익	72억	11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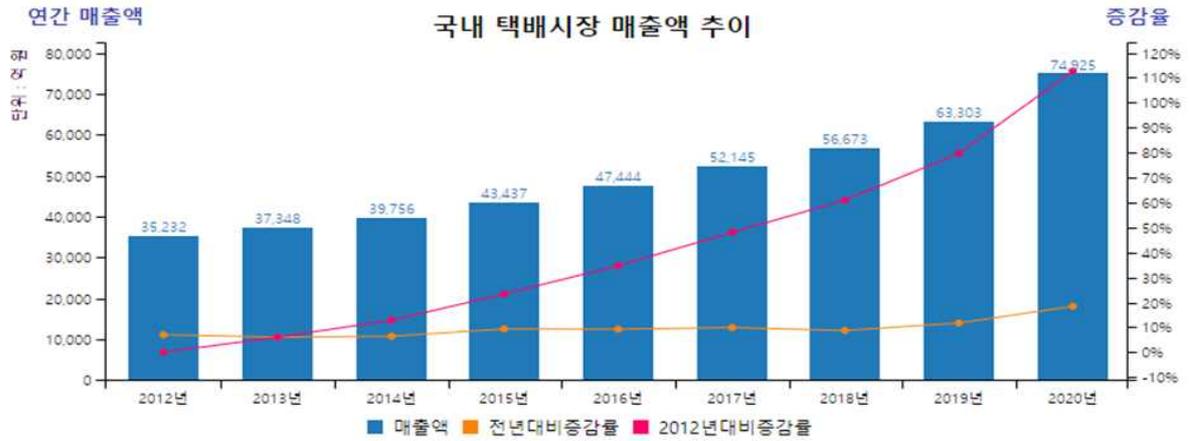
- 비대면, 디지털화
온라인 주문의 폭발적 증가
물류창고와 배송 급성장
130개 기업 매출액 50조원 돌파



물류 대기업 매출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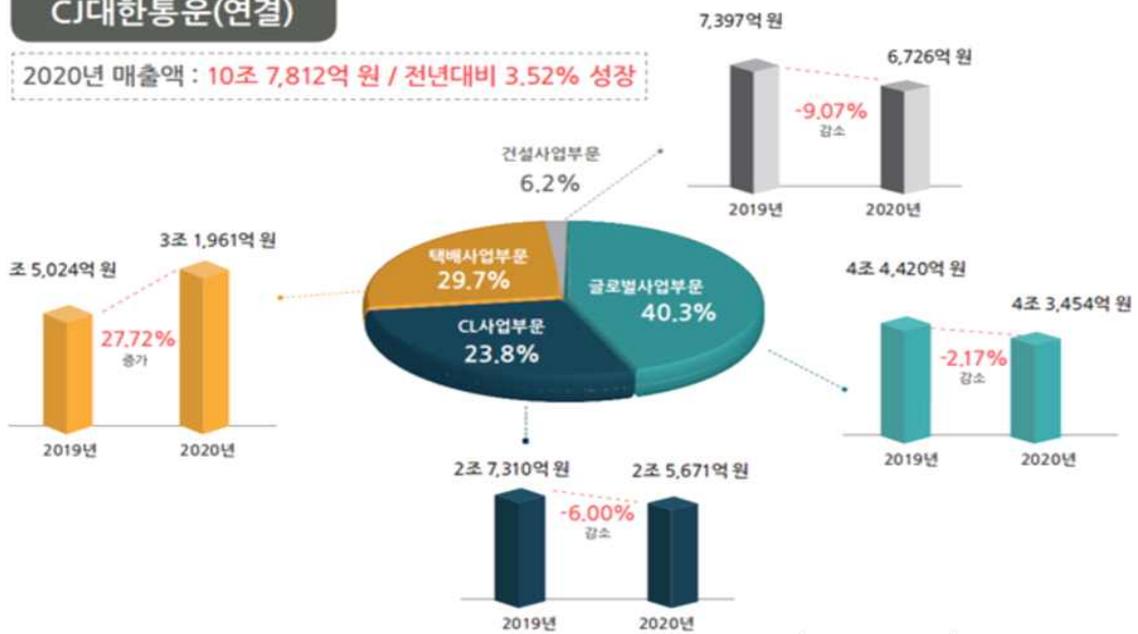
기업명	2019	2020	증가율(%)
CJ대한통운	6.6조	6.9조	5.2
지오영	1.9조	2.9조	41.4
판토스	2.5조	2.7조	10.0
롯데글로벌로지	2.1조	2.3조	13.8
한진	1.8조	1.9조	6.4
삼성전자로지텍	1.1조	1.5조	41.5
동원로엑스	5,936억	9,390억	58.2
DHL코리아	4,488억	5,895억	31.4
로젠	4,426억	5,128억	15.8

택배산업 2020 매출액 급증



CJ대한통운(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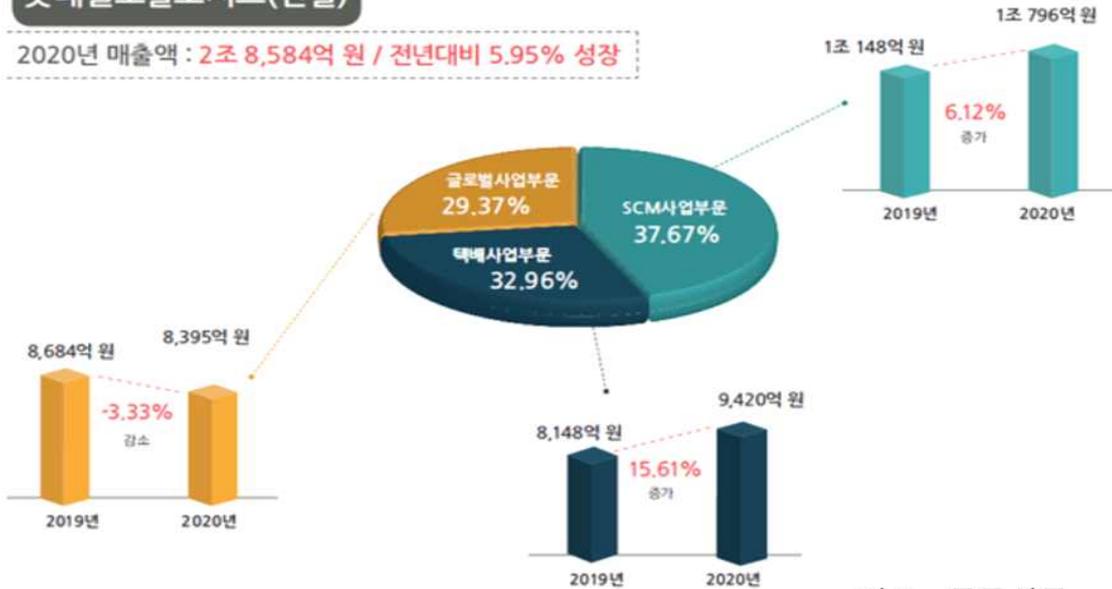
2020년 매출액 : 10조 7,812억 원 / 전년대비 3.52% 성장



자료 : 물류신문

롯데글로벌로지스(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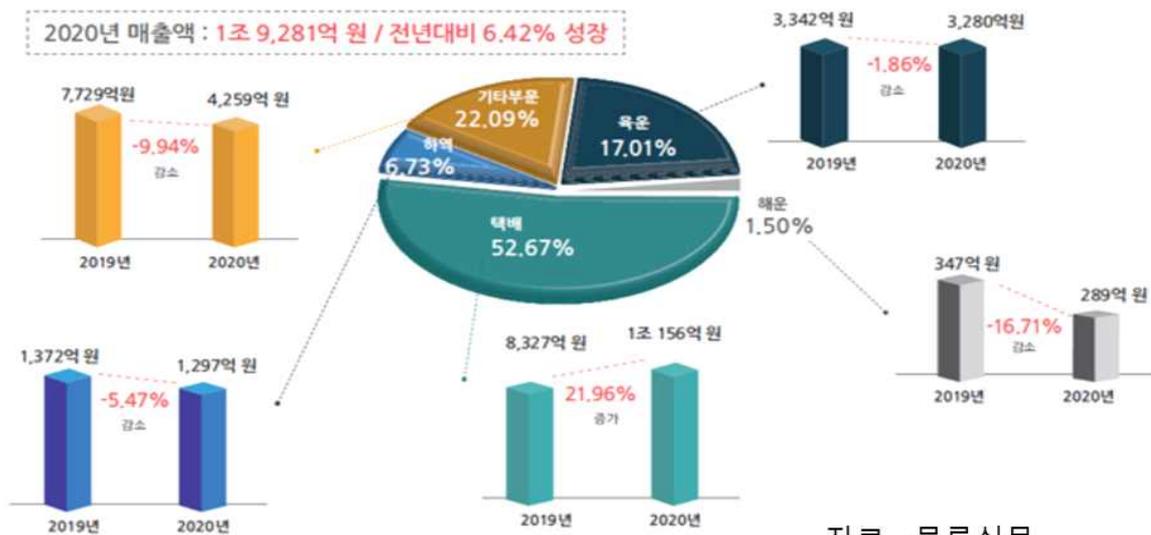
2020년 매출액 : 2조 8,584억 원 / 전년대비 5.95% 성장



자료 : 물류신문

한진(개별)

2020년 매출액 : 1조 9,281억 원 / 전년대비 6.42% 성장



자료 : 물류신문

물류산업 노동조건

● 택배 과로사

- 특수고용 확대, 장시간 노동, 분류작업 전가, 점심 거르고 작업
- 열악한 터미널 시설(휴게시설 전무, 환풍기, 화장실 부족)
- 과로사(2020년에만 16명 사망)
- **두 차례 사회적 합의** : 국토부, 민주당, 택배사, 과로사대책위(노조), 소비자대표 서명. (사측 비용으로 분류작업 인력투입, 산재보험 지급)
-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등 **택배사들이 합의 불이행**
- 언론 일방적 노조만 공격

● 화물운송 투쟁

- 열악한 조건 : 장시간 노동, 상하차 전가, 휴게시설 전무, 장시간 대기.
- 에스피씨(물류업체)가 화물연대와의 **합의 불이행(4월), 재합의도 파기**
- 7월 노조 전면파업, 대체 운송 차단, 언론은 일방적으로 노조만 공격
- 9.16 사측이 계약종류 통보,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 시기 플랫폼기업 최대 매출 기록

- 플랫폼기업은 **소비자와 공급자 연결**시키고, 양측에서 **중개 수수료** 취득하므로 독과점에 용이한 구조
- 코로나 시기 온라인주문, 비대면화로 디지털 플랫폼시장 급성장
-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이 디지털 기술 기반 시장 확대
- 매년 사상최대 매출 갱신 중인데,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급성장
- **기업가치도 몇 배 증가**하여 재벌 대기업을 추월함
-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 중소 영세업체에 수수료 인상**으로 갈등

카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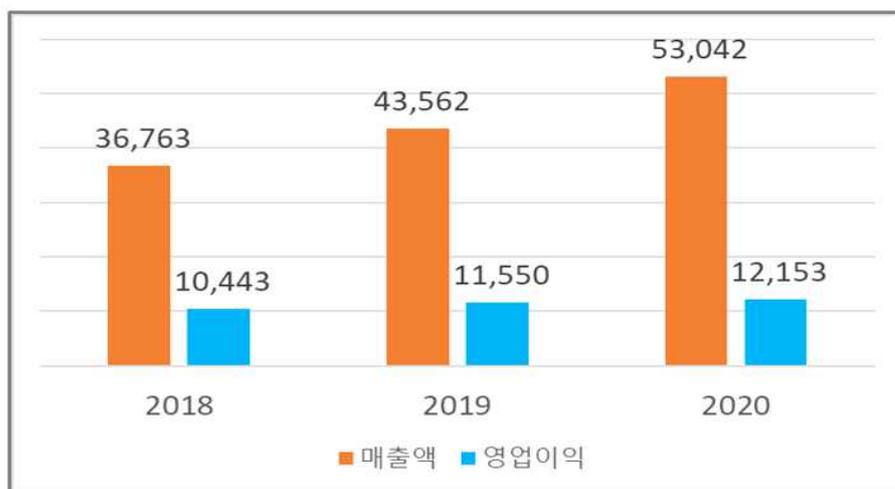
기업가치
2020년 34조
2021년 63조



자료 : 공시시스템

네이버

기업가치
2020년 48조
2021년 63조



자료 : 공시시스템

쿠팡

기업가치
2018년 10조원
2021년 79조원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2016~17 K-GAAP 개편, 2018~2020 K-IFRS 연결 기준

자료: 공시시스템

플랫폼기업 독과점 심화

- **플랫폼기업 독과점** : 온라인 시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 1등만 생존 전국적/세계적 수준의 독점 가능. 시장장악 후 독점가격.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외국기업 및 재벌 투자)**
- 금융, 유통, 택배, 음식배달, 퀵, 택시, 대리운전 시장 등 문어발 진출
- 특수고용 등 불안정고용으로 장시간 노동, 건당 수수료, 고객 평가제 배차 알고리즘(일감 차별), 과로사(쿠팡 2020~21상반기 7명)
- 공정거래위 : 카카오는 택시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골목상권인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 **대기업의 플랫폼기업 변신**
현대차(자율주행, 로봇, 도심항공, 모빌리티), SK(스마트홈), KT(금융, 물류, 데이터센터), LG(스마트홈) 등 삼성(금융, 건설, AI/모바일, 스마트홈)
- **자영업자(600만) 시장 위협,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직 양산**
대면노동/전통산업 쇠퇴, 정부는 신산업(재벌/플랫폼기업)만 지원

2021 대기업 실적 회복, 최대 매출

최근 3년간
100대 기업
상반기 매출액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상반기 100대 기업 매출액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

- 매출액 49.5조 원 증가
- 매출액 5분위 배율(5분위/1분위) : 10.7배 → 11.3배
- 의약의료,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 크게 증가, 기계, 조선 등 감소

2021년 상반기 500대 기업 영업이익 최고 기록

- 2020년 대비 200% 이상 증가
- 2019년 대비로도 6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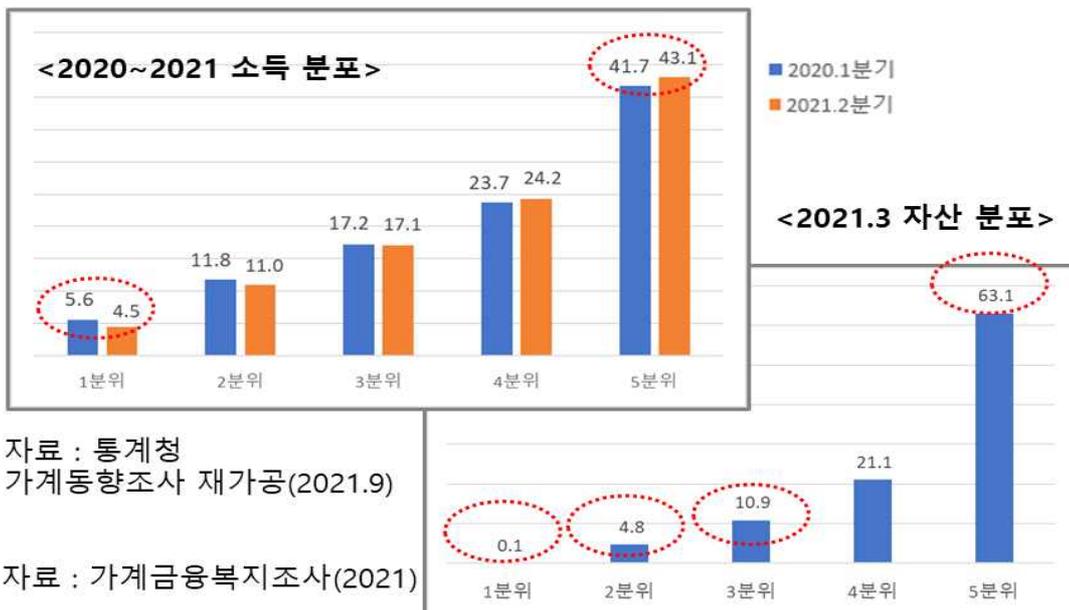
500대기업 업종별 2021년 상반기 실적현황

회사명	주식 대상	매출	영업이익	2021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대비			
				매출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IT전자	21	225,794	32,267	40,250	13,121	21.7%	68.5%	39,577	15,284	21.3%	90.0%
자동차 부품	21	138,007	8,101	28,775	5,586	26.3%	222.1%	18,104	3,025	15.1%	59.6%
석유화학	30	146,722	15,963	27,944	17,271	23.9%	특자전환	2,960	9,273	2.1%	138.6%
철강	12	62,357	6,149	12,138	4,551	24.2%	284.9%	5,130	2,690	9.0%	77.8%
상사	6	31,994	617	7,488	129	30.6%	26.5%	2,381	22	8.0%	3.6%
운송	7	29,628	3,565	5,949	2,761	25.1%	343.3%	3,548	3,089	13.6%	648.8%
유통	16	46,777	982	3,516	928	8.1%	1740.7%	-1,022	-525	-2.1%	-34.9%
생활용품	15	19,422	2,245	2,665	938	15.9%	71.7%	1,545	681	8.6%	43.5%
서비스	17	25,170	2,887	1,992	-1	8.6%	0.0%	3,882	854	18.2%	42.0%
공기업	6	52,414	2,190	1,951	-165	3.9%	-7.0%	-774	930	-1.5%	73.8%
건설 및 건설자재	21	54,420	3,431	1,938	732	3.7%	27.1%	1,035	876	1.9%	34.3%
식품료	18	31,449	2,467	1,597	98	5.3%	4.1%	4,119	673	15.1%	37.5%
통신	3	28,418	2,249	1,097	403	4.0%	21.9%	1,493	570	5.5%	34.0%
에너지	5	8,500	234	798	-78	10.4%	-25.0%	237	10	2.9%	4.5%
제약	8	5,493	1,191	612	246	12.9%	26.0%	1,961	909	55.5%	322.7%
여신금융	3	4,551	1,070	193	273	4.4%	34.3%	244	417	5.7%	63.9%
보험	10	57,826	3,465	-958	1,255	-1.6%	56.8%	4,491	1,476	8.4%	74.2%
조선·기계·설 비	15	37,317	151	-5,114	-649	-12.1%	-81.1%	-7,061	-3,143	-15.9%	-95.4%
은행	8	63,727	9,524	-11,925	2,229	-15.8%	30.6%	-1,876	939	-2.9%	10.9%
증권	13	57,437	6,384	-14,462	3,891	-20.1%	156.1%	9,630	3,384	20.1%	112.8%
합계	255	1,127,421	105,132	106,443	53,517	10.4%	103.7%	89,604	41,436	8.6%	65.1%

출처 : CEO스코어 / 단위 : 십억원

* 조사대상 : 500대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40개 기업 중 조사시점까지 실적을 발표한 255개 기업

5분위 소득, 자산 분포



I 발제 3.

**쿠팡 플랫폼의 등장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 의한 유통산업의 변화**

II 이성원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지영업자총연합회

쿠팡 플랫폼의 등장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 의한 유통산업의 변화

이성원 사무총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비대면 거래 확산 및 자영업 매출감소

(단위:억원)

항목	2019년				2020년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4/4	
합계	315,895	325,293	337,374	374,079	368,381	374,617	420,411	453,036	20%
가전(컴퓨터/가전)	50,516	49,711	49,266	53,748	58,899	63,151	68,070	76,981	31%
도서(서적/문구)	7,664	6,266	6,724	7,343	8,873	8,034	9,200	9,881	29%
패션(의류/화장품)	94,896	104,136	100,999	123,320	101,106	112,312	109,961	131,972	8%
식품(음식/농축수산)	39,750	40,076	44,642	45,161	59,636	57,513	72,748	71,071	54%
생활(생활/자동차)	37,427	37,971	39,448	42,931	52,065	54,478	60,737	61,547	45%
서비스(여행/문화)	76,278	80,025	88,973	93,723	76,497	68,398	86,691	89,925	-5%
기타	9,363	7,108	7,321	7,853	11,305	10,732	13,004	11,659	48%

[출처 :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 식품과 생활용품은 소득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필수 품목이며, 반복 재구매가 가장 활발한 품목이라는 측면에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10대와 20대가 주도하던 온라인 소비가 4~50대까지 확대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 1996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1년 1~7월 거래액 규모는 108조784억원으로 집계, 100조원을 넘어섰음. 특히, 배달서비스 거래액은 2조 377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5% 급등, 가전·전자·통신기기 역시 48.3%, 일반 음식료품과 생활용품도 각각 30%와 17.4%로 큰 폭 증가
- 비대면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 중.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가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자영업자 매출은 53% 수준에 불과함. 주요 영세 자영업자 업종의 매출 하락 폭은 ▲호프집 87% ▲음식점 62% ▲카페 48% ▲편의점 26%로 집계됨
-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올 7~8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 매출감소는 '40% 이상~60% 미만'이 30.2%로 가장 많았음. 이어 ▲20% 이상~40% 미만(29.0%) ▲20% 미만(17.6%) ▲60% 이상~80% 미만(10.0%) ▲80% 이상(4.6%) 등으로 나타남.

【2】 쿠팡의 등장과 유통산업의 변화

㉠ 쿠팡의 등장

- 시장 점유율 13% (2위)
- 한국의 아마존 표방
- 상품중개업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를 구축하여 제품을 직매입하고, 배송까지 하는 풀필먼트 (fulfillment) 서비스 제공
- 풀필먼트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로켓배송 도입
-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이 풀필먼트를 통한 매출
- 풀필먼트의 시초는 미국 아마존으로 실제 쿠팡은 제2의 아마존을 목표로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한 쿠팡플레이까지 최근 런칭. 로켓와우 회원은 로켓배송 제품의 무료 배송뿐 아니라 쿠팡플레이 무료 사용 가능 (월 2,900원)
- 로켓와우 회원에게 적용하던 로켓배송 서비스를 일반 회원에게도 적용

㉔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장으로 인한 유통산업의 변화

① 네이버

- 시장 점유율 17% (1위)
- 쇼피파이 (Shopify) 방식 : 판매자가 이커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 최저가 검색으로 이커머스 1위의 영향력
- 최근 이마트, CJ 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통해 메가 물류센터 구축
- 신세계 이마트 매장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해 네이버 장보기를 통한 당일 배송, 익일 배송 및 멤버십을 활용한 무료 배송, 스마트스토어 신선식품 배송 검토 중
- 배달대행 스타트업인 메쉬코리아와 풀필먼트 업체인 위킵, 두손컴퍼니, FSS에 투자
- 최근 메쉬코리아가 공격적인 투자로 강남구 논현동에 도심형 물류센터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구축. 연대 50개 장기적으로 300개 구축 예정
- 네이버가 메쉬코리아 등에 투자를 한 것은 쿠팡의 단점인 근거리 배송의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사실상 이커머스 관점에서 약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
- 명품 카테고리 구축 및 정기 구독, 렌탈 서비스 도입

② 신세계

- SSG닷컴에서 SSG푸드마켓 대표 상품 450종을 선별해 새벽배송을 시작
- 신선식품 특화 물류센터인 네오(NEO)에 입고시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배송
- SSG닷컴에 백화점 식품관을 오픈해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국내5대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시작
-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 도입. 지정한 500개의 상품이 타 물보다 비싸면 차액만큼 자사 포인트를 적립
- 이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배송을 주무기로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해 2~3시간 배송 서비스 도입 예정
- 이베이 코리아 예비입찰 참여
- 네이버, CJ 대한통운과의 지분 교환으로 사업확장
-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SSG닷컴에서 네이버 페이를 사용 적립 가능 및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무료 배송 프로모션

- 향후 신세계 포인트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통합 혜택 서비스
- 오픈마켓 시범 운영 시작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고려해 식품과 명품의 입점 제한)

③ 롯데

- 통합 오픈마켓 롯데온 시범 운영
- 7월까지 판매수수료 0% 적용
-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 후보
- 이마트의 500개 생필품에 같은 최저가 보상 적립제 실시
- 롯데온 엘포인트 5배 적립 서비스
- 지난해 12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 정리, 추가로 80개 매장을 정리해 오프라인 매장 수를 30% 가까이 축소 계획
- 새벽배송 서비스인 ‘새벽에 On’ 서비스 확장
-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삼는 스마트스토어와 세미다크스토어 확대
- 롯데마트의 물류망을 이용해 주문 후 2시간 안에 물건 포장 및 배송까지 하는 ‘바로 배송’ 서비스 시작
- 1월부터 배송 플랫폼 스타트업 PLZ와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릴레이 배송 시범 서비스 돌입. 릴레이 배송은 2시간 배송 완료를 원칙으로 마지막 현관까지의 구간인 ‘라스트마일’ 배송을 하는 ‘플렉서’ 를 따로 두고, 플렉서가 본인 담당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배송 트럭에서 제품을 오토바이, 도보 등을 활용해 초고속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

④ 마켓컬리

- 올해 상장 예고
- CJ대한통운과 협업으로 새벽배송을 확장하여 연내 전국으로 확대
- 기본 채소, 과일, 수산, 정육, 유제품, 쌀, 김 등 60여 가지 식품을 1년 내내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EDLP(Every Day Low Price) 도입

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고객 주문 상품을 1시간 내 배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 전국 253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 인근(반경 2~2.5km 내) 고객이 홈플러스 모바일 앱(App)이나 온라인 사이트 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즉시 배송 코너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의 장보기 전담 직원인 ‘피커(picker)’가 상품을 취합해 배송

⑥ GS 리테일

- GS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한 전국단위 물류 네트워크 구축
- 통합 쇼핑 플랫폼 ‘마켓포’ 런칭
- 한진 등 택배사의 물류센터와 GS리테일이 보유한 편의점, 슈퍼마켓 매장 (약 1만 5,320개)을 연결
- GS숍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전담 택배사들(24개)이 바로 배송할 수 있는 물품은 집 앞까지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가져다 놓는 구조

⑦ 우아한 형제들 - B마트

- 초소량 번쩍 배달을 주요 전략으로 1인 가구 대상의 30분~ 1시간 내 배송(퀵커머스)
- 출범 9개월 만에 월 매출 963% 증

【3】 쿠팡의 사업확장과 불공정 논란

Ⅰ 쿠팡의 사업확장 진행 과정

- ① 2011년 소셜 코머스 런칭
- ② 2014년 로켓배송 도입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직매입과 및 직배송 시작)
- ③ 2017년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 도입 (멤버십 가입 시 로켓배송 상품 무료 배송)
- ④ 2017년 로켓직구 시작 (일정 금액 이상 무료 배송으로 3일 안에 배송)
- ④ 2018년 로켓프레쉬 서비스 시작 (신선 신품을 익일배송에서 당일 배송으로 확장)
- ⑤ 2019년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쿠팡 이츠 서비스 시작
- ⑥ 2020년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런칭
- ⑦ 2021년 쿠팡이츠 마트 서비스 시작

② 쿠팡의 불공정 논란

[2021년 7월 5일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발췌]

① 노동 분야

- 불안정한/불합리한 고용구조 (쪼개기 계약 및 일용직 계약)
- 관리자 갑질 / 비인격적인 노동자 통제
- 노동집약적 업무 방식에 따른 집단감염 및 화재 위험 노출
- 강한 노동강도와 폭염, 혹한에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는 노동 조건

② 입점업체 - 아이템위너

-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일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가 대표 상품판매자로 노출되는 정책. 강제 최저가 판매 정책.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모두 몰아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요소 발생

③ 배달중계 - 쿠팡이츠

- 불공정 약관 피해 (판매자의 의무만 명시, 플랫폼 의무는 명시하지 않음)
- 판매자의 정당한 방어권 안내 미비

【4】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와 공공 플랫폼의 역할

①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규제 방안

① 유통산업발전을 통한 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을 시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무력화 시도 발생)

② 강력한 기업 분할 명령

-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독과점 폐해의 시정이 어려운 경우 플랫폼과 유통 / 물류에 대한 기업 분할 명령 도입

③ 노동 보호를 통한 규제

- 야간 및 주말 업무 중단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및 골목상권 보호

㉒ 지역 화폐 활성화 및 공공 플랫폼 확장

① 지역 화폐 활성화

- 지역 화폐 발행량을 늘려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패턴 확장

② 공공 플랫폼 확장

- 공공 플랫폼을 단순히 음식 배달 중개가 아닌 전통시장 배달 앱 방식의 지역 단위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입점을 통해 음식/식자재/생활용품/세탁/꽃배달 등의 종합 배달 중개로 확장
- 결제수단으로 지역 화폐와 결합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 (지역 화폐 할인율에 지역 화폐로 결제 시 추가 할인 적용)

I 발제 4.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된
재벌총수들

II 김주호 경제금융센터 팀장

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된 재벌총수들

김주호 팀장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사법부와 역대 정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

- 1996~98년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 : 세법상 평가이익이 12만 7,750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발행 후 3차 배정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배당(125만 4천 여주 96억 원 규모),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와 그룹 지배권 확보함.
-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 : 당시 장외시장에서 5~6만 원대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발행(321만 6천 여주 230억 원 규모), SK증권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각함
- 참여연대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고발, 검찰의 무혐의
-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로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 출범, 2008년 4월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및 이건희 전 회장 등 불구속 기소
- 2008년 7월 서울중앙지법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선고,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BW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확정(당시 법원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사업보국, 공소제기 이후 회장직 사임, 각종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사회봉사, 대통령 체육포장 등을 영향에 반영)

-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유죄 확정 5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 시행(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수입료 등 68억여 원을 특별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했다는 사실 발표)
-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2006년 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9백억 원 횡령 등 사건으로 구속수감(이후 보석허가), 2008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확정
-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1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950억여 원의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보복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0여 명의 경제인을 특별사면·복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465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2015년 8월 다시 한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고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14명의 경제인을 특별사면함.

2.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가석방

(1) 범죄사실

- 2021년 1월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86억 8천만 원의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함.
-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경 이건희 전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후 승계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추진 등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 정부 당국의 협조, 대통령의 승계작업 지지 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위해서는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1.21%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음(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1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용역 대금 36억 원, 말 구입비 36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16억 원)을 공여하고 특경가법상 재판 국외 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름

(2) 이후 진행 상황

■ 수사 및 기소과정

- 2016년 9월 한겨레신문이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과 관련해 국정 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10월에는 JTB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태블릿PC를 공개하며 국정 운영 개입 의혹을 보도함.
- 검찰은 10월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수를 구성하고 최순실 씨를 구속함과 동시에 11월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함.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2017년 2월 이재용 부 회장을 구속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함.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함.

■ 재판 과정

-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선고(용역 대금 36억 원, 말구입비 36억 원, 영재센터 16억 원 등 뇌물·횡령액으로 89억 원 인정)
- 2018년 2월 서울고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용역 대금 36억 원 만 인정하고 말구입비, 영재센터 등 무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함.
-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용역 대금 36억 원을 유죄 확정하고 말구입비 36억 원, 영재센터 16억 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횡령 및 뇌물 공여액 86억 원이 인정되는 경우 특경가법에 따라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했고 집행유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런데 돌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재 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 놓았으며, 삼성은 2020년 1월 삼성 7개 계열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함. 이에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 직후 열린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 시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기준의 핵심내용” 이라고 밝힘.

-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 연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 범죄에 적용되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양형에 반영하지만, 범행 이후 사후에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 특검도 이에 반발하여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만 2020년 9월 최종 기각됨.
- 2020년 10월 재개된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직권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측 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함. 세 심리위원은 삼성그룹 계열사와 준법감시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각자 제출함.
- 2021년 1월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86억 8천만 원의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함.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됨.

■ 가석방 결정 과정

- 법무부는 2021년 1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함.
- 실제로 법무부는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식화함. 법무부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해왔다면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형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3단계 심사(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힘.

-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고 발언한데 이어 6월 재벌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면론에 불을 붙임.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 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당대표의 발언에 의미가 있다며 사실상 가석방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함.
- 2021년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함.

(3) 문제점

■ 사법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 사법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3·5법칙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폐습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헌정 사상 최고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무려 87억 원의 횡령·뇌물공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음.
- 특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진행함. 다행히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논란으로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재벌총수 재판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며,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 특혜임.
- 준법감시위원회는 재벌총수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어서 향후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초법적인 가석방 강행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원칙적으로 사면 안함)을 제시하였음. 재벌총수들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이던 2015년 1월 당시 “재벌총수들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

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 이라고 밝혔으나 애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대상에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 등만 포함되었음.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더해 법무부는 최근 3년간 80%의 형기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인원이 244명, 2020년 추가 사건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이 67명이어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 중 과연 경제 상황을 이유로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임.

■ 취업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특혜

- 법무부는 2021년 2월 특경가법 위반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함. 실제로 우리 특경가법과 관련 판례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장 등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전부터도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석방 직후에도 경영보고, 회의주재 등의 경영행위를 하고 있음.
-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지난 2월 특경가법 위반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고서도 ‘미등기, 비상근, 무보수’ 라는 이유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행위가 취업이 아니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 법무부 장관으로의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임.
-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석방에 따른 경영활동 제약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남.

-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양형은 물론,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취업심사 위반행위에 대한 특혜까지도 누리고 있는 상황임.

3. 부영그룹 이종근 전 회장 : 가석방

(1) 범죄사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8년 2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4,300억 원 상당의 특경가법(횡령배임), 특가법(조세), 공정거래법, 임대주택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모두 12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함.
-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2010년부터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및 아파트 경비구역 입찰 시 응찰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에 9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렸음.
- 특히, 회사자금을 자신의 쌈지돈 쓰듯 활용했는데 △회사자금을 횡령해 약 119억 7천만 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대납에 활용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자금 43억 원을 자녀들의 해외 거주용 고가주택 구입 및 이사비용으로 유용 △계열사 광영토건이 처남에게 약 62억 원의 퇴직금을 이종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해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천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만 약 518억 5천만 원에 달함.

(2) 진행 상황 및 문제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8년 2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4,300억 원 상당의 특경가법(횡령배임), 특가법(조세), 공정거래법, 임대주택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모두 12개의 혐의로 구속기소 함.
- 그러나 구속 161일 만에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보석’

논란에 휩싸임. 실제로 재판부는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으나 이마저도 1심에서 일반보석으로 변경해주었으며, 이 회장은 무주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합동 워크숍 개최 연설을 하는 등 보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 판결하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함.(횡령액 366억 5천만 원, 배임액 156억 9천만 원).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재벌총수 봐주기 행태를 벌임.
- 나아가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마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함. 300억 원이 넘는 횡령 범죄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지만 피해변제를 주요 이유로 들어 최저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함. 그러나 이중근 회장의 경우 이미 2008년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 게다가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외부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에서 특혜를 받음.
- 그러나 이 또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수 개인의 범죄행위여서 준법감시제도의 취지와 애초부터 맞지 않고, 이미 이사회를 무시한 채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준법감시실 설치를 이유로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였다고 간주한 것은 명백한 특혜임.
- 대법원은 2020년 8월 원심을 확정하고 구속수감 함.
- 법무부는 2021년 8월 가석방 대상에 이중근 회장을 포함 시킴.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경우 가석방 심사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가석방 허가 사유조사 알 수 없음. 그러나 이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고령인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임.

4.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 무혐의

(1) 범죄사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1년 8월 태광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함. 이는 2019년 공정위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하며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하면서 진행된 사건임.
- 이호진 전 회장은 이미 2010년 1,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63일 만의 구속집행정지, 7년 9개월간의 황제보석 논란, 대법원의 두 번의 파기환송 결정을 거쳐 재판 9년만인 2019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음.
-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배우자와 외삼촌으로 하여금 그룹 경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도 경영기획실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 사전협의나 사후보고를 받음
-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그 배우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물,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2) 진행상황 및 문제점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

르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총수 일가에게 최소 33억 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인데 납득하기 어려움.

- 당시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 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되었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 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 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만 봐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